

30점 UP

시험 직전 막판 뒤집기



2023
김종규
헛총
헛갈리는 부패 총정리
선행정학

2023 헛총 선행정학(헛갈리는 부분 총정리 선행정학)을 펴내며

“

일선 수험현장에서 수십년간 수많은 수험생들을 지도해 오면서 느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합격생들과 불합격생들의 행정학 공부방법(특히 마무리)상 차이점입니다. 시험을 앞둔 모의고사에서도 일관되게 고득점을 하는 상위권 수험생들과 안타깝게도 점수가 기복이 심하거나 합격권과는 거리가 먼 60~70점대에 맴도는 하위권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그 차이의 원인이 뭘까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다 보니 학설과 이론간에 서로 대립·모순되고 헛갈리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행정학을 어려워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암기해나가지 않으면 절대 고득점이 안됩니다. 합격생들이나 고득점군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리가 되어있는 반면, 불합격생들이나 저득점군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단체를 대표하는 기관은 단체장인가, 지방의회인가?]에서 결론은 자치단체를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관은 단체장이지만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은 지방의회입니다. 즉 [외부대표 : 단체장, 주민대표 : 지방의회] 이런 식으로 깔끔한 정리가 필요한 것이지요. 또 [자본예산은 안정화를 저해하는가, 안정화에 기여하는가?]에서 결론은 경제안정화에는 기여하지만 재정안정화는 저해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 : 안정화, 재정 : 불안정]입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또는 “안정”이란 단어에만 매달려 있으면 틀리는 문제는 반복해서 계속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60~70점대에 머무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만 정리를 해준다면 바로 점수가 30점은 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정리할 시간과 여유가 안된다면 제가 해드리겠다는 생각으로 이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3년 3월에 공단기에 오시면 이 교재로 강의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행정학, 헛갈리는 부분 160제 총정리 특강(7회)]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강(약20강)으로도 바로바로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이 교재와 강의는 주제별로 4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제별로 헛갈림의 요지를 제시하고 -> 명쾌한 결론(해설)을 제시한 다음 -> OX풀이로 지문암기를 시켜주고 -> 관련기출문제를 제시하여 기출문제까지 완벽하게 정리하는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핵심은 OX지문 암기입니다. 9/7급 막론하고 초시생, 재시생이나 군무원, 공기업, 경간부, 경쟁승진 등 모든 수험생들에게 도움되는 사상 최초의 역대급 특강입니다. 극히 일부 주제를 제외하고는 9급수험생들도 반드시 알아야 할 매우 중요한 주제들이니 반드시 접해보시길 바랍니다.

”

합격생 추천의 글

얼마나 많은 정성과 고민이 들어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교재

헛총의 기획과 출간 과정을 보았기에 이 교재에 얼마나 많은 정성과 고민이 들어갔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단순 요약교재가 아니라, 말 그대로 헛갈려할만한 내용을 하나하나 골라 기출과 연계한 교재입니다. 수많은 행정학 교재가 있었지만, 수험생분들이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정리하여 실속있게 추린 교재로는 헛총을 유일하게 추천드리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험을 앞두고 간절하고도 불안한 마음이 들쭉날쭉하겠지만, 헛총 학습 후에는 보다 단단한 실력과 마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 2019 국가7급 합격 김은선 -

헛총은 마무리 단계에서 압축과 함께 들어가 할 필수 강의

저는 기출 강의를 들은 후 혼자 반복해서 기출문제집을 공부했는데, 보다 보니 지문들 간에 표현도 좀 다르고 언뜻 모순되어 보이는 내용도 많아 갈피를 잡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들은 헛총 강의는 제가 헛갈렸던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헛총을 통해 제가 헛갈렸던 부분 뿐만 아니라 다른 수험생들이 자주 하는 질문까지 정리할 수 있어 기출 지문을 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학 마무리 단계에서 여다나 압축과 함께 반드시 들어가 할 좋은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헛총은 강의 한 번 듣고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헛갈렸던 내용을 단권화 책에 같이 정리해 두고, 시험 직전까지 반복해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틀린 선지에 속지 않고 올바른 선지를 고르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 2021 국가7급 합격 박연아 -

행정학 킬러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유일한 교재

수험 과목으로써 행정학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라는 말처럼,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으로 선지를 구성하여 수험생들이 개념을 알고도 틀리는 과목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헛총 교재와 강의는 이러한 행정학 수험생들의 고민을 반영하여 수험생들이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답안을 자신 있게 마킹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방주사와 같은 콘텐트입니다. 헛총은 이미 행정학 공부에 어느 정도 된 수험생들에게는 빠른 시간에 핵심 주제를 다시 확인하고 넘어가는 회독용 교재이며, 공부 중인 수험생들에게는 행정학 고득점에 빠져있는 마지막 퍼즐 한 조각을 채워 넣어주는 교재입니다. 꼭 강의와 함께 교재를 보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리며, 회독 후 한층 단단해진 행정학 지식과 유연해진 문제풀이 스킬에 여러분 스스로 놀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 유일무이한 행정학 전략교재 헛총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더 가깝게 앞당기시길 바랍니다.

- 2022 서울9급 합격 김준범 -

헷총으로 전범위를 정리한 것이 고득점과 합격에 크게 기여

저는 기필고와 헷총으로 시험전까지 꾸준히 전범위 정리를 한 것이 행정학 고득점과 합격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뒷 단원을 하면 앞쪽 내용을 잊어버려서 효율적으로 전체를 정리할 수 있는 책을 찾다가 헷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행정학은 국정교과서가 없다보니 학자들마다 주장이 다르고 헷갈리는 부분들이 많아 동일한 지문같은데 어떤 문제에서는 맞는 지문이 되고 어떤 문제에서는 틀린 지문이 되는 등 수험생 본인이 혼자서 해결·정리하는 것이 힘든 경우가 많아 그런 것들이 스트레스였는데, 헷총은 헷갈리는 부분들만 빠르게 정리하여 회독하는데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진도별 기본서, 기출회독과 헷총을 병행하시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 될 것입니다.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책을 통해 좀 더 쉽게 합격의 꿈을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 2021 국가9급, 국가7급 합격 김수현 -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알려줘

행정학은 이론을 공부하다 보면 깊게 들어갈수록 더욱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매번 질문을 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나만 헷갈리는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도 들게 됩니다. 하지만 헷총으로 공부하고 이런 고민을 상당히 덜 수 있었습니다. 헷총은 특이하게 F&A의 형식으로 일정 실력 이상의 수험생들이 공통적으로 자신 없어 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을 명쾌하게 알려줍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기출 문제까지 수록되어 있어 실전까지 대비할 수 있는 흥미로운 책입니다. 헷총에 나온 내용을 공부하시면서 이해와 암기를 병행하신다면 이미 공무원 행정학의 9부 능선은 넘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합격 하시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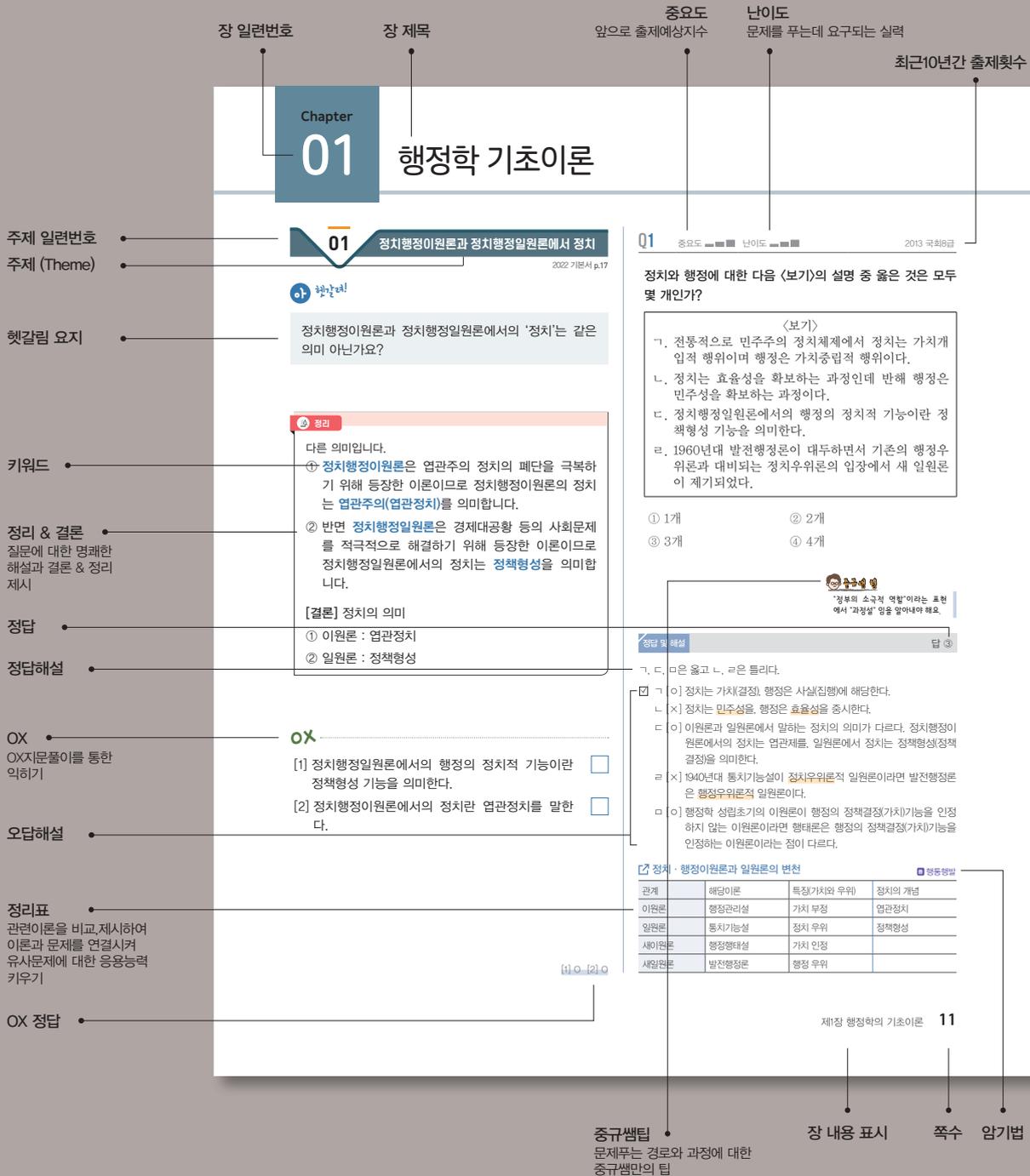
- 2021 국가7급 합격 허유경 -

헷갈리던 내용을 명확히 이해시켜주는 책

행정학은 기본서와 기출을 어느정도 공부하고 나면 헷갈리는 내용들이 많이 생깁니다. '앞에서는 맞다고 했는데 뒤에서는 왜 또 아니라고 하지?' 하며 책을 뒤적거리는 데에 많은 시간을 소요하게 됩니다. 저는 이런 시기에 '헷총'으로 헷갈리는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혼동되는 부분들을 묶어서 정리해두었기 때문에 스스로 헷갈리는 부분을 찾는 것보다 시간과 에너지를 크게 아낄 수 있습니다. 또 구어체로 설명이 되어 있어 이해하기 까다로운 개념들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문제들이 함께 실려있어 개념을 알맞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도 좋았습니다. '헷총'을 디딤돌 삼아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 2022 국가9급, 서울9급 합격 허소정 -

이 책의 페이지 구성과 특징



Ch.01 Themes

	1회독	2회독	3회독
01 정치행정이원론과 정치행정일원론에서 정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하는 본질적 원인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진보주의 & 보수주의 정부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포스트모더니티 & 인간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포스트모더니티 & 융합 · 통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6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7 바우처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8 민영화와 서비스의 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 공익의 실체설과 갈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공리주의적 공익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공익의 절충적 실체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내용적 합리성 & 실질적 합리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가외성의 특성 중 중첩 & 중복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기술성과 기술적 행정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Wilson과 기술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행태론과 가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체제론과 개방체제의 성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신행정론과 고객중심의 행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현상학 & 행태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현상학의 연구대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공공선택이론과 정치 · 행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공공선택이론과 대응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4 신제도론과 상호작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5 신공공관리론과 책임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6 신공공관리론과 임무중심의 행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7 신공공관리론과 포스트모더니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8 거버넌스 유형과 기업형정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9 논변적 접근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0 신공공서비스와 공익의 본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1 NPM과 행정의 본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2 NPM과 PCM에서의 정부역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3 행정재정립운동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4 분절화와 NPM · GOV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넛지이론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지도별 학습능력

70% 이상(19개 이상) 숙지 : 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 70% 이상(14~17개 이상) 숙지 : 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미만(12개 이하) 숙지 : 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Ch.07 Themes

	1회독	2회독	3회독
01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관심사항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2 정보통신의 발달과 지방자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4 특별지방행정기관(일선기관)과 주민접근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5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통일행정·종합행정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6 권한의 위임과 위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7 기관위임사무·단체위임사무와 법적 근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8 지방정부형태와 책임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09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형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자치단체 대표기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1 지방의회와 불신임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2 자치경찰제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3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4 부담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5 국고보조금과 재정격차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6 의존재원과 지방재정의 안정성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7 지방재정 위기관리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8 공직선거법 개정과 주민투표연령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9 주민조례청구제도와 간접발안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0 주민소송과 납세자대표소송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1 각종 주민참여제도의 청구요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2 지방자치단체조합과 특별지방자치단체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3 「지방자치법」 세부 개정내용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숙지도별 학습능력

70% 이상(13개 이상) 숙지 : 상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 70% 이상(8~11개 이상) 숙지 : 중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0% 미만(6개 이하) 숙지 : 하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5

넛지이론

2023 기본서 p.173

아 햇갈려!

최근 넛지이론 등 교과서에도 없는 새로운 행정이론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데 넛지이론이 뭔가요?

정리

최근 거버넌스 이후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비판적 이론으로 새로운 모형들이 문헌에 소개되고 있고 시험에도 출제되고 있습니다.

넛지이론은 그 중 하나로 정부가 선택(옵션)설계자로서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개입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허용하는 부드러운(자유주의적) 개입주의를 의미합니다.

[결론] 넛지이론의 핵심

- ①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정부가 도와주는 부드러운(자유주의적) 개입주의
- ② 넛지는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정부개입방식
- ③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급진적 점증주의 관점

OX

- [1] 넛지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는 것을 선택설계라고 한다.
- [2] 넛지는 디폴트 옵션 설정 방식처럼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수단이다.
- [3] 넛지는 전통적인 정책수단인 강압과 처벌보다는 유인이나 보상 같은 정책수단을 활용한다.

[1] O [2] O

[3] X (도덕적 설득, 유인과 보상, 강압과 처벌 같은 직접적 개입보다는 선택설계에 의한 부드러운 개입주의)

02

강제성에 따른 정책수단 분류

2023 기본서 p.189

아 헛갈려!

Salamon의 직접성에 따른 정책수단과 강제성에 따른 정책수단의 구분은 다른건가요?

정리

다릅니다, Salamon은 직접성과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정책수단을 구분하였습니다.

[결론]

직접성 높음	직접대부, 정부소비, 공공정보, 공적 보험, 공기업, 경제적 규제
강제성 높음	사회적 규제, 경제적 규제

OX

- [1] Salamon의 정책수단 중 공적 보험은 강제성이 높은 수단이다.
- [2] Salamon의 정책수단 중 경제적 규제는 강제성이 높은 정책수단이다.

[1] X (직접성이 높음) [2] O

Q1

중요도 난이도

2022 지방·서울9급

살라몬(Salamon)의 정책도구 분류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 ① 경제적 규제
- ② 바우처
- ③ 조세지출
- ④ 직접대출

공무원 팁

Salamon의 정책수단 유형을 묻는 문제가 직접성 기준에 이어 강제성 기준까지로 확대되고 있으니 좀 더 체계적인 대비와 이해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답 및 해설

답 ①

살라몬의 정책수단유형에서 강제성이 가장 높은 것은 경제적 규제이다. 이 문제는 직접성과 강제성을 구분해야되는 문제이다. 직접성은 정부가 직접적인 집행주체가 되는지의 여부와, 강제성은 강제력이 수반되는지의 여부이다. 경제적 규제는 직접성과 강제성이 모두 높지만 직접대출의 경우 직접성은 높으나 강제성은 높지 않은(중간정도) 정책수단이다. 인허가 등 경제적 규제가 직접대출 등 다른 정책수단에 비하여 강제성이 더 높은 수단이라는 점은 굳이 정책이론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

- ☑ ② [X] 바우처는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 ③ [X] 조세지출은 강제성이 낮은 정책수단이다.
- ④ [X] 직접대출은 강제성이 중간인 정책수단이다.

18

공공기관과 정부조직

2023 기본서 p.403

아 햇갈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의 범주에 정부기관은 당연히 포함되는거 아닌가요?

정리

공공기관의 개념과 범위는 **법률마다 다릅니다.**

-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입니다. 즉, 공공기관의 범주에 국가와 자치단체는 일단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② 아래 기관들도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습니다.
 - ㉠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
 - ㉡ 자치단체가 설립·관여하는 기관
 - ㉢ 상호부조기관

[결론]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는 기관

- ① 국가, 자치단체
- ② KBS, EBS
- ③ 자치단체가 설립·관여하는 기관
- ④ 상호부조기관

OX

- [1] 「공공기관 운영법」상 공공기관의 범위에는 정부 기관이 포함된다.
- [2] 「공공기관 운영법」상 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X (포함되지 않는다) [2] X (없다)

Q1

중요도 난이도

2017 국가7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100인 이상의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
- ③ 공기업은 시장형과 준시장형으로, 준정부기관은 위탁집행형과 기금관리형으로 구분된다.
- ④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2021.11.부터 변경된 공공기관 지정 기준에 유의하세요.

정답 및 해설

답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직원 정원 300인, 총수입액 200억, 자산규모 30억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한다(2023.11. 시행).

- ☑ ① [O] 공공기관의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경영 합리화,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되었다.
- ③ [O]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다.
- ④ [O]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신규 지정된 해를 제외하고 매년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주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종전에는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던 것을 2021.11. 부터는 직원 정원(50인), 수입액(30억) 및 자산규모(10억)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외의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변경되었다(「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그러나 최근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3.11. 부터는 정원 300인, 수입액 200억 및 자산규모 30억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도록 다시 변경되었다.

[결론]

- 2021.11. 이전 : 정원 50인 이상 # 정수자-323
- 2021.11. 이후 : 정원 50인 & 총수입액 30억 & 자산규모 10억 이상
- 2023.11. 이후 : 정원 300인 & 총수입액 200억 & 자산규모 30억 이상

06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2023 기본서 p.466

아 헛갈려!

최근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문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데 어느 정도 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정리

[결론]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의 변천

기관	정부(연도)	성격
총무처	정부수립이후(1948)	비독립단독형, 총리직속
중앙인사위원회 & 행정자치부 인사국	김대중 정부 (1999)	인사위(비독립합의형) : 인사정책 인사국(비독립단독형) : 인사집행
중앙인사위원회	노무현 정부(2004)	비독립합의형, 인사전반
행정안전부 인사실	이명박 정부(2008)	비독립단독형, 인사전반
안전행정부 인사실	박근혜 정부(2013)	비독립단독형, 인사전반
인사혁신처	박근혜 정부(2014~)	비독립단독형, 인사전반

OX

- [1] 우리나라는 합의제(위원회형) 중앙인사기구를 경험한 적은 있으나, 독립형 중앙인사기구를 경험한 적은 없다.
- [2] 1999년 김대중 정부시절 독립형 합의제기관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3] 현재 우리나라 중앙인사기관은 비독립단독형인 인사혁신처이다.

[1] O [2] X (비독립합의제기관) [3] O

Q1

중요도 난이도

2022 경찰간부

중앙인사행정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안전행정부의 인사 기능을 분리하여 인사혁신처가 신설되었다.
- ②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기관으로 입법부 · 행정부 · 사법부의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 ③ 준사법 기능은 중앙징계위원회와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수행한다.
- ④ 국무총리 소속이며 처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다.

공무원 토크

최근 우리나라 중앙인사행정기관의 연혁에 대해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정답 및 해설

답 ②

중앙인사행정기관인 인사혁신처는 비독립단독형 기관이며, 행정부의 인사 업무를 총괄한다. 입법부 · 사법부는 국가공무원법상 별도의 인사관장기관을 가지고 있으며 해당 기관 사무처에서 인사업무를 총괄한다.

- ☑ ① [O]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안전행정부를 개편하면서 인사기능을 새로 신설한 인사혁신처에 이전했다.
- ③ [O] 인사혁신처에 5급 이상 국가공무원 징계 심의·의결을 위한 중앙징계위원회와 공무원의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진행하는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
- ④ [O] 인사혁신처는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며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26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2023 기본서 p.545

아 햇갈려!

2021.7. 공무원노조 가입범위 개편에 이어 2022.10.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도 개편되었는데 공무원노조와 직장협의회 가입범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정리

공무원노조는 2021.7. 가입가능 직급제한이 폐지되었고, 공무원직장협의회도 2022.10. 가입가능 직급제한이 폐지되면서 서로 같아진 부분도 있고 아직 다른 부분도 있으니 잘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 1] 공무원노조와 공무원직장협의회 가입대상 비교

직종	공무원 노조 ¹⁾	공무원직장협의회 ²⁾
일반직	○ (전직급)	○ (전직급)
별정직	○ (전직급 상당)	○ (전직급 상당)
특정직	외무	○ (전직급)
	경찰	X
	소방	○ (전계급)
	교육	○ (교원 제외)
퇴직자	○	X

- 1) 공무원 노조 가입가능 직급제한 폐지(2021.7.6. 시행), 단 지휘·감독·총괄, 인사·보수, 교정·수사 등 종사자는 여전히 노조가입 불가
- 2) 공무원 직장협의회 가입가능 직급제한 및 경력 제한 폐지(2022.10.27. 시행), 단, 지휘·감독·총괄, 인사·예산·경리·출납·비서·기밀·보안·경비 종사자는 여전히 직장협의회 가입 불가

[결론 2] 협의회 결성단위

- ① 한 기관에 하나의 협의회만 설립 ○
- ② 두 기관에 걸쳐 하나의 협의회 설립 X
- ③ 협의회 간 연합협의회 설립 ○

OX

- [1] 퇴직자도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
- [2] 공무원직장협의회 경우 기관별로 하나의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협의회간 연합협의회를 설립할 수는 없다.
- [3] 경찰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노조에는 가입할 수 없지만, 직장협의회에는 가입할 수 있다.

[1] ○ [2] X (연합협의회 설립 가능) [3] ○

01

재정준칙

2023 기본서 p.575

아 헛갈려!

최근 재정준칙이라는 개념이 언론에서도 가끔 언급되고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는데 정확한 개념을 알고 싶습니다.

정리

- ① 재정준칙이란, 국가채무, 재정수지 등 국가 재정건전성 지표에 구체적인 목표치를 부여하고 이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강제적 총량적 재정규율)을 말합니다. 재정준칙은 크게 채무준칙, 수지준칙, 지출준칙, 수입준칙으로 구성됩니다.
- ② 현재 우리나라가 추진중인 한국형 재정준칙(2020년 발표, 2025년 시행 예정)은 채무규모와 재정수지가 일정 수준(채무규모는 GDP 대비 60%, 재정수지는 -3%) 이상 넘어가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결론] 재정준칙의 구성요소

채무준칙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한도
수지준칙	재정수지를 일정 범위 내에서 관리
지출준칙	총지출 한도나 총지출 증가율 등을 제한 (조세지출 등에 의한 조세감면을 포함)
수입준칙	재정수입의 최저한도 설정

OX

- [1] 재정준칙이란 재정에 운영에 대한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하여 재정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 [2] 재정수입준칙은 조세지출을 우회적으로 활용하여 세수감소를 초래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것을 막기 위한 준칙이다.
- [3] 우리나라는 2020년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하고 이를 「국가재정법」에 법제화하였다.

[1] X (재량을 통제하기 위함) [2] X (재정지출준칙)

[3] X (아직 법제화는 안되었음)

03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2023 기본서 p.579

아 햇갈려!

최근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문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데 어느 정도 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정리

- ① 최근 7급시험을 중심으로 각종 행정기구와 제도의 변천에 대한 문제들이 킬러문제로 출제되고 있습니다. 9급도 출제가능성이 있으니 대비가 필요합니다.
- ② 현재는 기획재정부 예산실이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구이지만 과거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결론] 우리나라 중앙예산기관의 변천

시기	중앙예산기관	비고
1948	기획처 예산국	
1954	재무부 예산국	
1961	경제기획원 예산실	경제기획원 신설(재무부는 국고수지 총괄)
1994	재정경제원 예산실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를 재정경제원으로 통합
1998	기획예산위원회(기획,예산), 재정경제부 예산청(예산편성)	중앙예산기구의 이원화
1999	기획예산처	기획예산위원회와 예산청을 기획예산처로 통합
2008	기획재정부 예산실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통합

OX

- [1] 김대중정부는 중앙예산기구와 중앙인사기구를 합 의제기관형태로 설치·운영한 적이 있다.
- [2] 1961년 신설된 경제기획원은 국고 수입·지출에 대한 총괄기능을 담당하였으며, 재무부는 중앙예산기관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1] O [2] X (반대)

23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2023 기본서 p.668

아 햇갈려!

발생주의 회계방식 도입으로 우리나라 공공부문의 모든 회계는 발생주의로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회계는 여전히 현금주의라고 하네요. 예산회계와 재무회계는 어떻게 다른가요? 햇갈립니다.

정리

2008년 우리나라 공공부문에 발생주의 회계방식이 도입되었지만 모든 결산서류가 발생주의로 전환된 것은 아닙니다. 성격상 현금주의로 작성되어야 하는 서류들도 있습니다.

[결론] 예산회계와 재무회계 비교

- ① 예산회계(세입세출결산서) : 현금주의
- ② 재무회계(정부재무제표) : 발생주의

구분	예산회계	재무회계
의의	예산의 집행실적	재정성과 및 재정상태 보고
회계	현금주의·단식부기	발생주의·복식부기
대상	세입세출결산서 등	재무제표
지향	정부 내부보고용	국민에 대한 공개용

OX

- [1] 재무회계는 현금주의와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2] 발생주의의 도입으로 국가결산보고서상 세입세출결산서는 발생주의로 작성되고 있다.

[1] X (반대) [2] X (현금주의)

Q1

중요도 ■■■ 난이도 ■■■

2022 지방·서울9급

정부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가회계는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e-호조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② 재무회계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예산회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 ③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을 자산과 부채로 표시할 수 있다.
- ④ 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 결산보고서에 현금주의가 아직 일부 남아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정답 및 해설

답 ②

②는 반대이다. “예산회계”는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이, “재무회계”는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이 적용된다. “예산회계”는 단순히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실적을 현금주의 방식으로 기록한 대륙계국가의 전통적인 회계방식이고 “재무회계”는 재정성과를 발생주의방식으로 기록한 영미계의 현대적인 회계방식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는 대륙계회계의 영향을 받아 예산회계방식만 사용하였으나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무제표는 모두 재무회계(발생주의·복식부기)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세입세출결산서 등은 여전히 예산회계(현금주의·단식부기)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예산의 궁극 목적인 재정에 대한 통제와 책임 확보 그리고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서는 현금주의로 운용되는 예산회계와 발생주의로 운용되는 재무회계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 ① [○] 국가회계는 기획재정부가 구축한 통합재정관리시스템인 디브레인(dBrain) 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회계는 행정안전부가 2005년 구축한 통합지방재정관리시스템인 e-호조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 ③ [○] 발생주의에서는 미수수익이나 미지급금이 각각 자산과 부채로 인식되지만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는다.
- ④ [○] 정부재무제표는 거래가 발생하면 발생의 사실에 따라 차변과 대변 양쪽에 동일한 금액으로 이중기입하는 복식부기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03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2023 기본서 p.758

아 헛갈려!

최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변천에 대한 상당히 구체적인 지문들이 고난도 문제로 출제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요?

정리

최근 7급은 물론, 9급시험에서도 우리나라 지방자치제의 변천에 대한 깊이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으니 상세한 내용은 아닐지라도 역대 정부별로 상징적이고 핵심적인 주요 내용들은 정리·숙지가 필요합니다.

[결론]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변천

구분	주요 내용
이승만 정부	지방자치법 제정(1949), 시·읍·면 자치, 지방의회 구성(1952)
5.16	지방의회 해산 및 단체장 임명제로 전환(1961), 시·군 자치제로 전환(1961)
노태우 정부	지방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재구성(1991)
김영삼 정부	단체장 선거(1995), 동시선거체제 도입(1995)
노무현 정부	시·도 교육감 직선제 법제화(2006) ¹⁾
문재인 정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2021),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2022)

1) 2007년 부산 교육감 보궐선거(최초 직선제), 2010년 5차 지방선거(전국적 실시)

OX

- [1] 1995년부터 시·도 교육감 직선제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실시되었다.
- [2]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에서 시·군자치제가 도입되었다.

[1] X (2007년) [2] X (읍·면 자치제)

7급용

Q1

중요도 난이도

2022 국가7급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제헌의회가 성립하면서 1949년 전국에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 ② 1991년 지방선거에서 지방의회의원을 선출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 ③ 1995년부터 주민직선제에 의한 시·도교육감 선거가 실시되면서 실질적 의미의 교육자치가 시작되었다.
- ④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장·도지사 선거는 실시되었으나, 시·읍·면장 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공공예 팀

최초 각종 제도와 기관(지방자치제도, 지방분권추진기구, 정부조직개편, 중앙인사기관, 중앙예산기관 등)의 역사(연혁)을 묻는 고난도 문제가 빈출되고 있으니 대비하세요.

정답 및 해설

답 ②

1991년 노태우 정부는 지방의회를 구성하였으나 **자치단체장 선거약속을 지키지 못하였고 김영삼 정부시절인 1995년에 비로소 단체장 선거(동시선거)가 이루어졌다.**

- ① [X] 1949년 제헌의회에서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으나 한국전쟁 등으로 의원선거는 1952년에서야 실시되었다.
- ③ [X] 시·도 교육감은 임명제(1962~1990)와 간선제(1991~2001)를 거쳐 **2007년부터 직선제(부산 교육감 보궐선거)를 실시하였다.**
- ④ [X] 시·읍·면 자치제가 1961년 시·군 자치제로 변경되기 이전인 1960년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시·읍·면장 선거가 실시되었다.

09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형태

2023 기본서 p.791

아 헛갈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형태가 이전 기관대립형이 아닌건가요?

정리

2022.1.13. 전면 개정·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방정부 구성형태는 원칙적으로 기관대립형으로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 ① 원칙 : 기관대립형
- ② 예외 :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음

OX

- [1]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다.
- [2]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만을 채택하고 있다.
- [3] 우리나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자치단체마다 기관구성형태를 달리할 수 있다.

[1] O [2] X(기관대립형 외의 구성형태를 채택할 수도 있음)

[3] X(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Q1

중요도 난이도

2017 지방9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에서는 기관대립형 구조만을 채택하고 있다.
- ② 기관대립형은 행정책임의 소재가 분명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기관통합형은 영국의 의회형이 대표적이다.
- 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을 이원적으로 구성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도모한다.



'책임'이라는 표현, 잘 보셔야 합니다. '책임행정 구현'은 기관통합형의 장점이지만 '책임소재 명확'은 기관대립형의 장점입니다.

정답 및 해설

답 ①④

기관통합형은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자치단체 장을 이원적으로 구성하지 않고 지방의회가 지방행정에 관한 책임을 지는 중앙의 내각책임제와 같은 방식이다.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는 방식은 기관대립형이다.

- ☑ ① [X] 출제 당시에는 맞는 지문이었지만, 지금은 틀리다. 우리나라 개정 「지방자치법(2022.1.13. 시행)」은 원칙적으로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구분·운영하는 기관대립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투표를 거쳐 기관구성 형태를 자치단체마다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② [O] 기관대립형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이 명확하게 분리되어 결정과 집행에 대한 책임소재가 분명하다. 즉, 집행책임이 의회 다수의 원에게 분산되는 기관통합형과 달리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명확하다는 장점이 있다.
- ③ [O] 영국은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결정과 집행을 함께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통합형을 채택하고 있다.

주의

[기관통합형과 책임행정]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이라는 말과 책임소재가 명확하다는 말은 구분해야 한다. 기관통합형은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은 용이하지만 다수의 의원들 간 책임이 분산되어 책임소재가 명확하지는 않다.

[결론] 기관통합형

- 의회중심의 책임행정 구현 O
- 책임소재 명확 X

12

자치경찰제

2023 기본서 p.809

아 햇갈려!

현재 우리나라는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나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나요?

정리

- ① 2021 이전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실시되고 있었지만, 2021.1.1.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도 자치경찰위원회 설치 등 자치경찰제가 병행시행**되고 있다고 봐야합니다.
- ②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서는 지방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되는 자치경찰단을 별도로 두지는 않으며, **시·도지사 소속**이지만 국가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시·도경찰청**과 경찰서가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사무별로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지휘·감독을 이원적으로 받는 구조입니다.

[결론] 우리나라 자치경찰(2021.1.1. 이후)

- ① 자치경찰제 : 전국적으로 시행 → 시·도자치경찰위원회
- ② 자치경찰단 : 제주도만 시행 → 자치경찰공무원

OX

- [1] 우리나라는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 [2] 우리나라는 현재 경찰청장 소속하에 지방경찰청을 두고 있다.
- [3]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둔다.

[1] X (전국적으로 시행) [2] X (사·도에 시·도 경찰청을) [3] O

Q1

중요도 난이도

2017 국가7급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렇지 않다.
- ②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활동할 수 있다.
- ③ 병역자원의 관리업무 등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사무는 단체위임사무에 속한다.
- ④ 위임사무와 자치사무로 구분되며, 위임사무는 다시 기관위임사무와 단체위임사무로 구분된다.

정답 및 해설

답 ③

병역자원의 관리 등 병사사무는 주로 국가적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기관위임사무**에 속한다.

- ☑ ① [O]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지방자치법」상 포괄적 예시주의를 취하고 있으므로 구속력이 없다.
- ② [O] 2021.1.1. 현재 자치경찰제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자치경찰공무원으로 구성된 자치경찰단은 여전히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존재한다.
- ④ [O]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광의)에는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가 있다.

23

「지방자치법」 세부 개정내용

아 햇갈려!

금년 시험에 2022.1.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세부내용이 출제되던데 좀 더 상세한 개정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정리

[결론] 지방자치법 주요 개정내용(2022.1.13.)

내용	종전	개정	
특별자치시에도 기초단체를 두지 않도록 함	① 지방자치법 : 둘 수 있음 ② 세종시특별법 : 두지 않음	① 지방자치법 : 두지 않음 ② 세종시특별법 : 두지 않음	
기관구성형태의 자율화	일률적인 기관대립형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로 달리할 수 있음	
사무배분의 기본원칙 신설	규정 없었음	사무처리의 기본원칙 규정 ① 중복배분 금지의 원칙 ② 보충성의 원칙 : 기초단체 우선 원칙 ③ 포괄적 배분의 원칙	
가족관계등록사무 삭제	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	예시에서 삭제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별도법을 없었음(지방자치법) ① 19세 이상 ② 단체장에게 청구 ③ 60일 이내 의회 제출	주민조례발안법 제정 ① 18세 이상 ② 지방의회에 청구 ③ 1년 이내 의결	
주민규칙개폐의견제출제도 도입	규정 없었음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규칙의 개정·폐지의견을 단체장에게 제출 가능.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 통보	
주민감사 청구제도 개선	감사청구연령	19세 이상	18세 이상
	연대서명인원 축소	① 시·도 : 5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300명 ③ 기타 시·군·자치구 : 200명	① 시·도 : 300명 ② 인구 50만 이상 시 : 200명 ③ 그 밖의 시·군·자치구 : 150명
	청구시효 연장	사무처리일부터 2년	사무처리일부터 3년
정보 공개 강화	규정 없었음	자치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지방의회 정책지원전문인력 신설	규정 없었음	지방의원 정수의 1/2범위에서 조례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	
지방의원 겸직금지 대상 명확화	규정 없었음	해당 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 또는 사무위탁을 받은 기관 등 명확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	단체장이 사무직원 인사권 등 행사	사무직원의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을 지방의회 의장이 처리	
폐치분합시 최초 임시회의 소집	규정 없었음	지방의회 사무처장·사무국장·사무과장이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되는 날 소집	
중앙과 지방 협력 강화	규정 없었음	국가와 지방간 협력 관련 정책 심의를 위하여 법률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둠(의장 : 대통령)	
기초단체에 대한 시정명령과 재의요구 등 적법성 통제 강화	규정 없었음	주무부장관이 직접 기초단체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취소·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주무부장관이 기초단체장에게 직접 재의 요구 지시 가능
특례시 도입 등 대도시 특례의 다양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외에는 특례 규정이 없었음	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 등에도 특례 인정 가능하도록 함 *특례는 법률로 정함 (지방보편법상 부시장 2인 등)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근거 마련	구체적인 규정 없었음	① 특별자치단체는 법인으로 함 ② 규약을 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을 승인을 받도록 함 ③ 특별자치단체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의원과 단체장은 구성 지방의원 및 단체장 중에서 선출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자치단체의 설치나 해산, 규약변경을 권고할 수 있음. ⑤ 특별회계 설치·운영 가능	
규칙 제정범위의 자율성 확대	조례가 위임한 범위안에서 제정	조례의 범위안에서 제정	
단체장 직 인수위원회 신설	규정 없었음	① 당선 결정된 때부터 임기 시작후 20일 이내 존속가능 ②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포함, 시·도는 20인, 시·군·구는 15인 이내로 구성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www.kaspa.co.kr TEL. 02-532-5280~1
gong.conects.com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3판 2023년 1월 2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A동 103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FAX. 02-532-5315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9 791192 405193